

 기획재정부		<h1>보도자료</h1>	
보도일시	2021. 11. 16.(화) 10:00	배포일시	2021. 11. 16.(화) 8:00
담당과장	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과장 박철건(044-215-5740)	담당자	김영웅 사무관 ssuper84@korea.kr 김선영 사무관 ksunny3@korea.kr
	세제실 조세분석과장 최영전(044-215-4120)		박병선 사무관 ghibli80@korea.kr
	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장 김완수(044-215-5330)		김경중 사무관 rudwnd@korea.kr
	국고국 국채과장 김이한(044-215-5130)		최시훈 사무관 choisihoon@korea.kr
	재정관리국 재정성과제도팀장 이혜림(044-215-5470)		유정아 사무관 moolpure4u@korea.kr

「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」 2021년 11월호 [21년 9월말 기준]

- ◇ 국세·기금 수입 호조세로 3분기말 기준 재정수지 대폭 개선
- ◇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 규모·보유잔액·비중 모두 역대 최고치
 - 국채시장 변동성 우려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 지속,
필요시 적기 시장안정조치 시행 계획

□ **(총수입, 442.4조원)** 국세·세외·기금 수입 모두 증가세가 유지되어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86.0%

① (국세수입, 274.5조원) 주로 경기회복세의 영향으로 법인세, 부가가치세, 소득세 중심으로 증가하여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 87.3%

-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진도율이 각각 99.4%, 81.5% 수준

*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(조원, 개별기준): ('19) 56.3 → ('20) 67.5 <+19.8%>
('20.상) 29.6 → ('21.상) 50.1 <+69.1%>

** 소매판매(전년동기대비,%): ('21.1분기) +6.4, (2분기) +4.4, (3분기) +5.1

- 자산시장 호조,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(양도·근로 등)의 진도율이 87.3%

* 상용근로자(월평균, 만명): ('19.12~'20.8)1,453 → ('20.12~'21.8)1,476 <+1.5%>
명목임금(월평균, 천원): ('19.12~'20.8)3,528 → ('20.12~'21.8)3,680 <+4.3%>

- 향후에는, 자산시장 안정세·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 등으로 세수 개선세 둔화 전망

㉒ (세외수입, 22.2조원)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 증가*(+1.1조원), 석유 제품·LNG 수입량 증가에 따른 석유 관련 연료 수입·판매 부과금(+0.1조원) 증가 등으로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 75.8%**

*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률은 '21.9월말 기준 4.93%로 전년동기대비 +2.28%p

** 석유제품 수입량(누계) : ('20.8) 275 → ('21.8) 289백만bbl
LNG 수입량(누계) : ('20.8) 30 → ('21.8) 35백만톤

㉓ (기금수입, 145.6조원) 사회보험 가입자 증가, 적립금·자산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 85.1% → 3분기 말 기준, 기금 수입 진도율은 최근 10년來 최고 수준*

* 기금수입 3분기 진도율(%) : ('11) 74.8 ('13) 72.7 ('15) 74.1 ('17) 73.6 ('19) 73.2 **(21) 85.1**

- 고용 회복에 따른 국민연금·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자 수 증가*로 사회보험료 수입이 큰폭 증가(55.3 → 58.5조원, +5.8%)하고,

* 국민연금 소득신고자(만명) : ('20.7)1,878 → ('21.7)1,905(+27만명)

* 고용보험 가입자수(만명) : ('20.9)1,413 → ('21.9)1,452(+39만명)

- 국민연금(+16.5조원)*·사학연금(+1.2조원)·산재보험(+0.6조원) 등의 사회 보장성 기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운용수익 증가(+18.3조원) 등에 기인

*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(%) : ('20.8) 5.05 → ('21.8) 9.65(+4.6%p)

* 국민연금기금 적립금(누계, 조원) : ('20.8) 789 → ('21.8) 930.5(+142)

(단위: 조원, %, %p)

	'20년						'21년(잠정)				전년동기 대비			
	추경 (A)	결산 (B)	9월 (C)	9월 (누계D)	진도율		2차 추경 (G)	9월 (H)	9월 (누계I)	진도율 (J=I/G)	9월 (H-C)	누계 (I-D)	진도율	
					추경 (E=D/A)	결산 (F=D/B)							예산 (J-E)	결산 (J-F)
□ 총수입	470.7	478.8	36.6	354.4	75.3	74.0	514.6	44.9	442.4	86.0	8.3	88.0	10.7	12.0
◇ 국세수입	279.7	285.5	22.2	214.7	76.8	75.2	314.3	26.3	274.5	87.3	4.1	59.8	10.6	12.1
○ 일반회계	271.9	276.3	21.5	208.5	76.7	75.4	304.6	25.6	265.9	87.3	4.1	57.4	10.6	11.9
- 소득세	88.5	93.1	6.7	65.1	73.6	69.9	99.5	7.7	86.9	87.3	1.0	21.8	13.8	17.4
- 법인세	58.5	55.5	8.3	50.0	85.6	90.1	65.5	10.3	65.2	99.4	2.0	15.1	13.8	9.3
- 부가가치세	64.6	64.9	1.9	47.7	73.9	73.6	69.3	2.4	56.5	81.5	0.5	8.8	7.7	7.9
- 교통세	15.5	13.9	1.3	11.4	73.6	81.7	15.7	1.4	13.0	83.0	0.1	1.6	9.4	1.3
- 관세	7.7	7.1	0.6	5.0	64.6	70.6	8.3	0.8	6.4	76.4	0.3	1.4	11.8	5.8
- 기타	37.2	41.8	2.9	29.2	78.7	70.0	46.2	3.0	37.9	81.9	0.2	8.6	3.3	11.9
○ 특별회계	7.8	9.3	0.6	6.2	79.6	67.3	9.6	0.6	8.6	89.6	0.0	2.4	10.0	22.3
◇ 세외수입	29.1	26.9	1.9	19.6	67.2	72.6	29.3	2.7	22.2	75.8	0.8	2.6	8.6	3.1
◇ 기금수입	161.9	166.2	12.5	120.1	74.2	72.2	171.0	15.9	145.6	85.1	3.4	25.5	11.0	12.9
(사보기금*)	95.8	100.0	8.4	72.9	76.1	72.9	99.5	10.2	94.3	94.8	1.8	21.3	18.6	21.8

* 국민연금기금,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, 고용보험기금,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

□ **(총지출, 472.0조원)** 적극적인 재정집행이 지속되는 가운데, 2차 추경 물량 추가 등으로 3분기 말 진도율은 78.0%로 전년수준 유지

○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소비쿠폰 등 집행 제약, 건설 원자재 수급차질에 따라 재정사업 집행에 애로요인도 발생

⇒ 11월 들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소비쿠폰 재개, 상생소비지원금 등 소비 진작 사업 집행 본격화, 관급 원자재의 원활한 조달 등 집행애로 해결 노력 등을 통해 4분기 집행을 제고에 만전

(단위: 조원, %, %p)

	'20년						'21년(잠정)				전년동기대비		
	추경 (A)	결산 (B)	9월 (당월 C)	9월 (누계 D)	진도율		2차추경 (G)	9월 (당월 H)	9월 (누계 I)	진도율 (J=I/G)	증감		진도율 (J-E)
					추경 (E=D/A)	결산 (F=D/B)					9월 (H-C)	누계 (I-D)	
◇ 총지출	554.7	549.9	46.1	434.8	78.4	79.1	604.9	44.7	472.0	78.0	△1.4	37.2	△0.4
○ 예산	377.5	374.4	27.3	304.5	80.7	81.3	409.7	29.3	321.6	78.5	2.0	17.1	△2.2
- 일반회계	323.5	320.8	23.9	261.7	80.9	81.6	348.8	26.0	273.3	78.4	2.1	11.6	△2.6
- 특별회계	54.0	53.6	3.4	42.7	79.2	79.7	60.9	3.3	48.2	79.2	△0.1	5.5	0.1
○ 기금	177.3	175.2	18.9	130.2	73.5	74.3	195.2	15.4	148.1	75.9	△3.4	17.8	2.4
(사회보장성기금)	61.2	59.1	5.5	44.9	73.4	76.0	63.2	5.5	49.2	77.8	△0.0	4.3	4.4
○ 세입세출외*	-	0.4	0.0	0.1	-	36.4	-	0.0	2.4	-	△0.0	2.2	-

* 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

< 주요 재정사업 집행 실적 >

□ ①민간소비를 촉진하는 사업, ②글로벌 에너지가격 및 원자재가격 상승 대응을 위한 사업, ③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고용회복 지원 사업 적극 집행

① 2차 추경사업의 **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**는 11.10일까지 총 **4,789만명(총계)에 14.2조원 지급**(총 16.3조원(국비) 중 87.4% 집행)

- 상생국민지원금(국비, 8.6조원)은 **4,271만명에게 8.4조원(97.1%) 지급**

※ 저소득 추가 국민지원금(0.3조원)은 대상자 281만명(94.9%)에 대해 0.3조원 지급완료(9월말)

- 소상공인 손실보상(2.4조원)은 **10.27일부터 지급을 개시하여 11.10일까지 51만개사에 1.5조원 지급**,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(4.2조원)은 **185만명에 4.1조원(97.3%) 지급**

- 상생 소비지원금(0.7조원) 10월분 캐시백은 총 **3,875억원 발생, 810만명**에 대해 **11.15일 일괄 지급**

※ 11월분 캐시백은 12.15일 지급 예정(11.12일 기준 총 510억원 발생)

- ② **국내 석유수급 안정**을 위해 원유는 금년 비축유 목표량(26.8만배럴) 구매를 완료('21.10.7일, 119억원)하여 기존 재고 포함 10월말 기준 약 **1억 배럴 확보**
 -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10월말까지 비철금속 비축물량 10.3만톤 방출(전년비 137.8% 증가), **비철금속 비축물량 7.4만톤 확보**(2,561억원)
- ⑥ **고용유지·일자리 창출**을 위한 **일자리 지원 사업**(33.5조원)도 적기 집행에 주력
 - **구직급여**(11.3조원)은 9월말 기준 **61.2만명**에 대해 **9.6조원**(84.2%) 지급
 - * 취업자수 증가(9월말 전년동월대비 +67.1만명) 등 **고용시장 회복**으로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감소 추세
 - ** 구직급여 수급자(만명) ('21.4)73.9 (5)70.4 (6)69.3 (7)67.9 (8)64.7 (9)61.2
 - **직접일자리 사업**(3.4조원)의 경우, 10.15일 기준 3.2조원(96.3%) 교부, 2.4조원(72.3%) 지급

□ **(재정수지)** 국세·기금수입의 개선흐름에 힘입어 3분기 말 기준으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전년동기대비 50.8조원 감소 ('20.3/4말 △80.5 → '21.3/4말 △29.6조원 +50.8)

○ 3분기 말 기준 적자 개선폭은 최근 10년來 최고 수준

* 통합재정수지 증감(3/4말 전년동기대비, 조원) :('12년)△126 ('13년)△6.0 ('14년)△4.4 ('15년)△120 ('16년)26.7 ('17년)4.5 ('18년)1.4 ('19년)△40.6 ('20년)△53.9 (**'21년)50.8**)

(단위: 조원, %, %p)

	'20년						'21년(잠정)				전년동기대비		
	추경 (A)	결산 (B)	9월 (당월 C)	9월 (누계 D)	진도율		2차 추경 (G)	9월 (당월 H)	9월 (누계 I)	진도율 (J=I/G)	증감		진도율 (J-E)
					추경 (E=D/A)	결산 (F=D/B)					9월 (H-C)	누계 (I-D)	
◇ 총수입(A)	470.7	478.8	36.6	354.4	75.3	74.0	514.6	44.9	442.4	86.0	8.3	88.0	10.7
◇ 총지출(B)	554.7	549.9	46.1	434.8	78.4	79.1	604.9	44.7	472.0	78.0	△1.4	37.2	△0.4
◇ 통합재정수지 (C=A-B)	△84.0	△71.2	△9.6	△80.5			△90.3	0.2	△29.6		9.7	50.8	
◇ 사회보장성 기금수지(D)	34.6	40.8	2.9	28.0			36.2	4.7	45.0		1.8	17.1	
◇ 관리재정수지 (E=C-D)	△118.6	△112.0	△12.4	△108.4			△126.6	△4.5	△74.7		7.9	33.8	

□ **(국가채무)**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월말 기준 164.2조원 (발행한도 186.3조원의 88.1%)

※ 10월 중앙정부 채무는 936.5조원(국고채 841.9, 주택채 82.9, 외평채 11.7 등)

○ 300%에 육박하는 **응찰률**(1~10월 283%)로 **안정적으로 소화**되고 있고,

- 특히,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가 우리 경제 견조한 펀더멘털 등에 힘입어 유입규모·보유잔액·보유비중에서 모두 역대 최고치 기록

* 外人 국고채 순투자(조원) : ('19)+12.0 ('20)+23.3 ('21.1~10월)+35.3
 外人 국고채 보유잔액/비중(조원 % 기말): ('19)98.3/16.1 ('20)121.6/16.7 ('21.10월)156.9/18.7

○ 국고채 조달금리는 1~10월 평균 1.75% 수준이나, 10월 중 2.18%로 크게 상승

※ 국고채 조달금리(%) : ('16~'19 평균) 1.96 ('20) 1.38 ('21.1~10월) 1.75

-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,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에 더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고조 등으로 금리가 급등

* 10.1~10.29일 주요국 국채10년 금리변동(bp) : <韓>+34 <美>+7 <英>+11 <獨>+9
 10.1~10.29일 주요국 국채 3년 금리변동(bp) : <韓>+51 <美>+24 <英>+23 <獨>+15

- 이에 대처, 11월 발행물량 대폭 축소(10.5→8조원), 2조원 긴급 바이백(11.2일 발표, 11.5일 시행) 등 적기 시장안정조치 시행으로 최근 금리는 안정세로 전환

* 국고채 10년물(%) : (9월말)1.91 (10월말)2.58 (11.5)2.35 (11.12)2.34(10월말比 △24bp)

국고채 관련 주요 통계

(조원, %)	'20년말	'21.10월말	'21.8월	'21.9월	'21.10월
발행잔액	726.8	841.9	832.7	831.7	841.9
발행액	174.5	164.2	16.0	11.5	12.8
평균 조달금리*	1.38	1.75	1.73	1.82	2.18
응찰률(%)	295%	283%	284%	283%	278%
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(순투자)	121.6(+23.3)	156.9(+35.3)	(+3.5)	(+3.0)	(+2.3)
보유비중(%)	16.7%	18.7%	18.1%	18.6%	18.7%

* '20년말, '21.10월말의 경우 각각 '20년, '21.1~10월 평균 조달금리, 그 외 월평균 조달금리

□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근 재정동향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

① 3분기까지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세가 지속되었으나, 4분기에는 자산시장 안정화, 세정지원 조치* 등으로 세수 개선세 둔화 전망

* 코로나 피해업종 부가세 유예('21.10→'22.1월), 종합소득세('21.11→'22.2월) 중간예납 납부유예

② 기금수입의 경우, 취업자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자 증가, 국민연금 등의 자산운용 수익 증가 등으로 3분기 말 기준, 기금수입 진도율은 최근 10년來 최고 수준(추경예산대비 85.1%)을 기록

③ 통합재정수지는 국세·기금수입 호조세로 3분기 말 기준 적자 개선폭이 최근 10년來 최대 수준을 시현

* ('20.3분기) △80.5 → ('21.3분기) △29.6조원 +50.8조원

④ 국고채도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소화되고 있으며,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가 유입규모·보유잔액·보유비중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 견조한 펀더멘털을 반증하고 있다고 언급

- 한편, 10월 국고채 금리 급등에 대처하여 11월 발행물량 대폭 축소, 긴급 바이백 등 선제적 조치로 금리가 안정화 되었다고 평가하고,

- 향후 국채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, 필요시 국고채 발행량 조절, 한은과의 정책공조 등 적기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임을 밝힘

⑤ 연말까지 재정지출은 당초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, 중앙부처·지자체·공공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재정·공공 투자사업의 집행률 제고,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힘

<붙임>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1월호(배포용)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

참고

11월호 주요재정이슈 요약

※ 기고문을 자체 요약한 자료이며, 전체본은 「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1월호」(붙임)에 게재

① 중국 '공동부유' 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(이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연구원)

- (목적) 빈곤탈피를 위한 '선부론'의 한계점 노출에 따라 사회전체가 부유해지는 '공동부유(共同富裕)'로 국정기조 전환('21.8월)
 - * 선부론(先富論) : 1985년 덩샤오핑이 제시한 국가발전 이념, 개혁개방 이후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 사람들이나 일부 지역이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허용
- (주요내용) 주민소득 향상, 균등한 공공서비스 보장 추진
 - (소득향상) 최저임금과 경제성장률·사회평균임금의 연동 강화, 기술인재·소규모 창업자에 대한 인적투자 확대
 - (돌봄강화) 노인 1만명 당 요양보호사의 수 '25년까지 대폭 확대(18→25명), 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운영 등 추진
 - (복지확대) 의료·고용·산재보험을 성급(省級)에서 통합관리*,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, '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1만호 건설
 - * 중국의 사회보험은 현급 이상의 각 인민정부에서 운영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각 행정지역마다 개인의 부담수준, 보장범위와 수준 등에서 차이 발생
 - (규제강화) 합리적인 분배·민생보장을 위해 개인소득세·기부금 세액공제 정비, 부동산 보유세 입법 추진, 빅테크·부동산·사교육 산업 규제* 강화
 - * 부동산·사교육 산업 통제로 출산을 제고 및 불평등 완화 독과점 기업인 플랫폼 기업 규제 지속
- ※ 저장성*을 공동부유 시범구로 선정해 시범사업 실시 중('21.6~)
 - * 시진핑 주석이 과거 당서기로 재임했던 지역으로, 주민 소득이 비교적 높음
- (평가) 불평등 해소 등 긍정적 면과 기업 활동 위축 등 부정적 평가 상존
 - '공동부유'는 경제성장률과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동시 추구 → 복지·교육·주거부문에 대한 투자 강화는 바람직
 - * 골드만삭스('21.9월) : 중국 정부는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에 동일한 가중치
 - 빅테크·부동산·사교육 산업 규제 강화로 중국 실물경제 위축,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인건비 상승은 중국진출 우리기업들의 부담 등으로 작용 우려

② 삶의 질 지표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해외사례 및 시사점(장윤정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)

- (논의배경) 글로벌 금융위기('08) 이후 GDP를 보완해 환경·보건·여가 등 국민 삶의 다양한 질적 차원을 측정하려는 움직임 확산
 - * OECD는 '더 나은 삶의 질 지수(Better Life Index, BLI)'를 '11년 개발하고, 주거·소득·건강·삶의 만족·환경·안전 등에 대한 국가별 지수 발표(2~3년 주기)

- 삶의 질 지표를 예산과정에 연계하는 사례
 - (뉴질랜드) '18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자원배분 우선순위 선정시 삶의 질 지표*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
 - * 청년자살률, 가정폭력, 아동 빈곤율, 마오리 원주민과의 융화, 탄소배출량 등
 - (이탈리아) 예산안 부속서류로 삶의 질 지표 보고서를 포함, 신규 사업이 안전, 환경 등 삶의 질에 미치는 기대효과 수록
 - (캐나다) 예산안 설명 자료에서 삶의 질 영역* 및 하위영역별 개선과 연계되는 예산사업 프로그램 소개
 - * '20년 국민 설문조사를 거쳐 번영·건강·환경·사회·거버넌스를 핵심영역으로 선정

- 환경 인지예산을 시행중인 사례
 - (OECD) '녹색 예산에 대한 파리 협약(17년)'을 통해 각국에 환경·기후변화 부문에 대한 예·결산서 도입과 성과관리 강화 제안
 - (프랑스) 전체 지출사업과 조세수입에 대해 온실가스, 토양, 수질 등 환경영역에 대한 영향 포함하여 '녹색 예산서' 편성('21년~)
 - * '22년 예산안 전체 2,927억 유로 중 환경 친화적 지출은 325억 유로(11.1%)로 전년대비 +85억, 환경에 위해적인 지출은 전년대비 △10억 유로
 - (아일랜드) 녹색채권 발행과 연계*하여 온실가스 인지예산의 규모**를 예산서에 첨부('18년~)
 - * 녹색채권 판매를 통해 조성된 자금이 투자된 사업의 환경영향에 대한 투자자 공시 의무
 - ** 저탄소기후복원 등에 기여하는 사업의 '21년 규모는 전체 예산 중 3.5%(31억 유로)

- (시사점) 한국은 2010년 성인지 예산 도입, 2023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·결산 제도 도입 예정이며, 이외에도 재정투입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 필요

③ 자원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중기재정운용 방향
(정재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)

□ (논의배경) 전세계는 선형경제*에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폐기물 저감 등 '순환경제'(circular economy)로 전환 中

* '채취 → 생산 → 소비 → 폐기'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는 인구증가 등으로 환경파괴 등 문제점 노출

○ 우리나라의 경우, 1회용컵·봉투 등의 감축 성과를 거두었으나,

-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소비 증가에 따른 포장재 폐기물 확대**

* 커피전문점 1회용품 75% 감축, 제과점 비닐봉투 사용 84% 감축 등('19)

** 재활용폐기물 발생량('20.上)은 전년 동기 대비 +11.2%(플라스틱 +15.6%)

- 폐기물 수거가 민간업체* 위주로 운영되나, 대부분의 폐기물 수거·관리업체는 영세하여 폐기물 재활용이 미흡

* 페트병, 폐비닐 등 재활용폐기물 중 공공이 수거하는 비율은 40%에 불과

□ (중기 정책방향) 자원순환 경제 정착을 위해 취약점 보완 필요

○ (포장재 폐기물) 포장재 재질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사업자 스스로 포장재 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는 유인책* 마련 필요

* 현재는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는 수준으로, 평가 결과에 따른 분담금 차별화 등 경제적 유인 제공 필요

○ (재활용시장) 수거·재활용 업체의 대형화·광역화 유도, 폐기물 비축 강화 등으로 재활용 시장 활성화

□ (시사점) 순환경제 관점에서 제품개발 단계부터 재활용까지 쉰 주기적 활용방안 모색 필요

○ 전기차 폐배터리의 에너지 저장장치(ESS)로 재사용 기술개발 등 미래 폐기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

4 재정성과관리체계 개편 및 프로그램 성과목표관리 주요내용 (이혜림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제도팀장)

- (추진개요) 재정지출 증가·사업규모 확대 등으로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정성과관리체계 개편* 추진
 - * '22회계연도 재정사업부터 **성과목표관리**(성과계획·보고서)는 '단위사업'에서 '프로그램' 단위로 상향, **성과평가**는 '세부사업' 단위로 일원화('20.2월 차관회의)

- (성과목표관리) 거시적·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'22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'단위사업' → '프로그램'으로 격상
 - * (단위사업)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 수단으로서 업무추진의 개별 사업단위 (프로그램)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(activity)의 묶음

- 성과관리대상·지표 수는 대폭 줄여 행정부담은 완화하고, 국민체감형 지표를 설정하여 국민 이해도와 체감도 향상
 - * ('21년 단위사업 기준) 성과관리대상 1,778개, 지표 4,711개(부처평균 86개) → ('22년 프로그램 기준) 성과관리대상 476개, 지표 1,040개(부처평균 18개)
 - ** (단위사업 지표)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, 기후변화회의 참여건수 등 → (프로그램 지표)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, 할당업체 감축실적 등

-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·환경적 외부요인을 분석하고,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성과제고에 기여토록 유도
 - * (예시 : 고용부 장애인고용증진 프로그램) 코로나19 장기화,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강화방안('21.5월)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 채용 사업주 추가지원, 비대면 교육 등을 반영

- (향후계획) 프로그램 단위의 거시적 성과목표관리와 세부사업 단위의 미시적 성과평가가 상호 보완되도록 추진하여 제도 실효성 제고
 - (성과목표관리) 부처·분야별 성과지표를 개발하고, 성과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성과DB 구축 등 시스템 고도화 추진
 - (성과평가) '22년 재정사업부터 '세부사업'으로 평가를 수행하여 유사중복·전달체계·사업 효율성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

5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
(최봉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)

- (추진배경) 노령·1인 장애인 가구 증가*, 돌봄·일자리·건강 등 보편적 요구와 장애특성에 따른 욕구 등을 감안, 맞춤형 지원 확대

* 장애인 중 만65세 이상 비중(%) : ('11)38.0 → ('14)41.4 → ('17)45.2 → ('20)49.9
 장애인 가구 중 1인가구 비중(%) : ('11)17.4 → ('14)24.3 → ('17)26.4 → ('20)27.2

- (투자방향) ① 돌봄서비스, ② 소득보장, ③ 편의증진 및 건강보장에 중점 투자('22년 복지부 예산안 4조원)

① 공백없는 지원으로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

- (활동지원) 활동지원급여 확대(1.5→1.7조원), 주간활동서비스 내실화(月 100→120시간)로 자립생활 지원 강화
- (발달장애)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확대(0.9→1만명), 방과후 활동서비스 단가 인상(14,020→14,805원) 등 돌봄부담 경감
- (장애아동) 행동발달 재활서비스 지원인원 확대(6.5→6.9만명), 중증장애아 돌보미 시간확대(年 720→840시간) 등 양육부담 완화

② 기본적인 생활보장 및 근로능력에 따른 고용연계 강화

- (소득향상)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
 * (기초급여) 30→30.15만원 / (지원대상) 소득하위 70% 중증장애인(377,156→378,774명)
- (고용연계) 직접일자리 확대(2.5→2.7만개), 고용연계 시범사업 (중증장애인 1,000명)으로 근로능력에 따른 직업재활·일자리 등 연계

③ 일상생활 속 편의증진을 통한 자립지원 및 건강권 보장

- (편의증진) 장애인보조기기 지원(4천명), 저상버스·장애인콜택시 확대(2,030→3,264대) 등 이동권 보장 강화
- (건강보장) 장애인 재활운동 보건소 확대(180→220개소),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대(8→12개소) 등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·안전지원 확대